

동북아 해양갈등과 한국의 대응

박경우*

*해군사관학교

Nav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nd the Response of Korea

요 약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해양은 부의 원천이자 이동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나, 동북아 해양은 과거 역사유산의 잔재하에 해양갈등요소가 산재하여 국익과 해양안보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동북아내 해양갈등사례(도서영유권 중심)를 살펴보고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복잡계 이론을 적용·고찰하여 이에 대한 합의와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I. 서 론

인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늘 선호해 왔지만, 그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져 왔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견해를 빌리자면, 교통과 통신의 혁명을 이룬 19세기 제2의 세계화를 거치면서 인류는 활발한 교류를 함으로써 오해해소와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로의 전진을 구상해왔고 그 발원지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유럽의 희망이 동북아에도 조금씩 비취지고 있는가? 애석하게도 동북아는 갈등과 협력의 진자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도 완만하고 느린 진자운동이 아니라 파괴력 강한 속도감을 갖추고 움직인다. 동북아가 갈등과 협력의 진자운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21세기 속도의 시대에 동북아 지역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엘빈토플러가 속도의 관점에서 언급한 선두와 느림보는 안보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10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는 기관(국가)은 위험과 불안정성이 매우 커진다. 동북아 국가들의 국력변화는 고속도로 위에서 서로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에 비유할 수 있으며, 때문에 역내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갈등과 협력의 양극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치명적인 속도레이스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운영되며, 그 근저를 이루는 해양에 갈등 요인들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유럽과 달리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농경사회에서 상공업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속에서 대외의존적 경제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해양은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의 해양갈등과 협력의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해양갈등의 형태는 도서 영유권, 경제수역 차지, 해역지배권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의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이기적 행위 중심의 국가간에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없는 두 이론이 국제사회의 양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설적으로 기존의 시각들은 거대하고 복잡한 국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환원주의적 분석방식, 즉 복잡한 부분들을 잘게 썰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이며, 보다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고는 21세기 가장 복잡한 바다인 동북아 해양에 존재하는 갈등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응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며, 그 틀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이론인 복잡계 이론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은 다음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유용한 논의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해양갈등의 범위를 최근 이슈화되는 독도, 조어도, 쿠릴 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한정한다. 앞서 언급했듯 2장은 해양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복잡계 이론에 관한 고찰이며, 3~5장은 제시된 틀속에서 영유권 갈등과 위기의 본질을 분석한다. 6장은 분석결과가 한국에 주는 합의이며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결론이다.

II. 동북아 해양갈등 원인과 분석방법론

동북아 해양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에너지 등 자원 위기의 도래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에는 값싼 원유를 포함한 지하계 자원의 안정된 공급이 필요조건이다. 바다는 값싼 지하계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는 국익이 걸려 있는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해양권익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 문제이다. 둘째, 해로안보의 중

요성이다. 값싼 원유기반의 경제시스템에서 원유의 수송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의 근간인 원유수송로는 대단히 길고 위험하며, 이는 동북아 역내국가들도 대동소이한 문제이다. 말라카 해협 끝자락에서 동북아 해역까지 1,500마일의 해역에 대한 안보확보가 중요하며 타국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역내국가간 경쟁적 군비증강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자국안보 목적의 군비증강이 역내 상호간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힘에 의한 해결의 기대심리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어도 해역에서 보여준 중일 간 갈등은 높아가는 국력과 군사력이 문제 해결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러한 동북아 해양갈등 원인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간 갈등원인 분석의 기존이론들은 크게 로즈노(Rosenau), 키신저(Kissinger), 럼멜(Rummel), 진스(Zinnes), 윌켄펠트(Wilkenfeld) 등이 주장하는 내생적 원인들과 스카치폴(Skocpol), 페이지(Paige), 아이젠스타트(Eisenstadt) 등이 주장하는 국제체제 등의 외생적 요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왈츠(Kenneth N. Waltz)는 내외생적 요인들을 개인적·심리적 요인, 국가구조적요인, 국제체제적 요인으로 다분화하여 국가간 갈등과 분쟁 나아가 전쟁의 원인들을 설명해 왔다.[1] 그러나 기존이론들은 시공간이 압축되고 복잡해진 현재 국가들의 선택을 설명함에 있어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는 초기조건의 민감성에 기초한 비선형적 결과(현상)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양한 행위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들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도서영유권을 놓고 타국가와 갈등관계에 있을 때, 영유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택(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의 상호작용 결과가 어디로 어떻게 귀결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등원인에 있어 다양한 상호작용의 비선형적 결과들은 정보화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복잡계 이론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복잡계이론의 핵심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기유사성, 자기조직화, 임계현상의 창발현상을 들 수 있다.[2] 자기유사성이란, 어떤 일부를 확대해 보더라도 전체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닮아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자기조직화는 내부의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하나의 질서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임계현상이란, 특정수준이내까지는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특정수준을 넘어서면 비선형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갈등원인에 관한 복잡계 이론의 적용은 특히 국가간 갈등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위기 또는 무력도발로 치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용하다. 예기치 못한 무력도발의 상황은 복잡계에서 주목하는 창발현상(거시적 질서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창발현상을 출현시키는 요인들이 바로 자기유사성, 자기조직화, 임계 현상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을 사회

과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하는가이다. 복잡계 이론의 유용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 자기유사성은 양자간 갈등상황을 지속 반복시키는 사실적 징후들이며 이러한 반복적 징후들의 양과 강도의 측면이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자기조직화는 갈등 징후들의 여파에 의해 증폭되어지는 적대감정/여론의 확산을 말하며 특히 갈등 분야에 대한 감정의 수위와 공감계층의 확산이 중요한 측정대상이다. 임계현상은 갈등을 한순간 무력분쟁 내지 전쟁으로 폭발시키는 요인에 관한 것으로서 분쟁과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한 국가가 갈등문제를 힘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직접적 요인은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낙관적 판단(모험지향성)과 군사적 능력의 조합이기 때문에 임계현상의 조작적 정의는 갈등관계를 무력분쟁·전쟁관계로 이끌어가는 국가의 모험지향적 대외정책과 군사력의 임계점으로 내린다. 이러한 분석요소와 방법에 의거하여 본 고는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의 영유권 갈등과 관련하여 위기 또는 무력도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 위험성은 어느정도인지를 자기유사성, 자기조직화, 임계현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I. 독도 논쟁과 위험성 분석

개관.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권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전략적 차원에서 독도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자원은 글로벌경제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논란을 일으키는 발단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으로 시작되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과 1905년 소위 “도근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본은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조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전승국인 연합국에 의해 일본이 강제로 침탈한 침략영토에 대한 처리가 단행되었다. 전후 독도처리에 관한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훈령(SCALPIN No.677)”에서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그 뒤 1951년 9월 8일 마련된 전승국 연합국과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영토포기지역 가운데서 한국의 도서들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만 명시하고 독도를 직접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에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선언)”을 선포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을 확립하였고 이에 일본은 동년 1월24일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가정 및 청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 한국의 독도등대설치와 독도개발계획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후부터 일본순시선과 항공기 및 어선의 독도영해침범사태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분석. 독도영유권 관련 갈등관계를 지속시키는 자기유사성 요인은 주로 일본의 행동에서부터 비롯된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실적 징후들은 대략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일본정계의 독도 관련 망언들이다. 탈냉전이후 일본정계의 독도관련 망언들은 주기적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짙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 연립여당, 외무성, 총리, 참의원, 지사 등 당·정계 주요인사들의 독도 망언은 끊임없이 나왔으며 최근에는 마쓰모토 외상이 독도공격을 일본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둘째, 일본지자체의 독도편입 행위이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에는 일본 정계에서 이의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본교과서의 독도 한국영토 왜곡 표기이다. 최근 일본 문부성은 독도를 자국영토라 표기한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등 독도 관련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갈등을 반복시키는 요인이다. 넷째,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자국영토 표기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국방부 항의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해왔다는 점이다. 다섯째, 일본의 독도 내정간섭이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관련 행동시마다 내정간섭성격의 항의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한 바 있다. 서술한 5가지는 양측간 갈등을 지속 반복시키는 대표적인 징후들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자기조직화 요인은 어떠한가? 이는 양측간의 적대감정과 적대여론의 확산 정도를 의미하며 대략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21세기 들어 뚜렷해진 일본 정계의 보수화 현상이다. 탈냉전이후 보-혁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 구도로 전환된 현상이나 고이즈미 내각 이후 강화된 구조개혁 및 신보수화 노선은 이후 일본정계의 보수화 성향을 강화시켰다. 둘째,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정의 수위이다. 독도역사교과서 기술문제만 보더라도 인터넷상의 일본의 비난/비방(반한감정)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반일감정은 또 다른 축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2006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57.1%가 한국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셋째, 일본 극우파의 영향 확대이다. 일본인 69명이 최근 독도로 본적을 옮기고 호소다 前관방장관은 한국의 독도실효지배 강화에 맞서 한국이 보낸 지진성금을 거부하자고 호소하는 등 극우파의 활동과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언급한 세가지 요소는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치 않고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자기조직화 현상이다. 다음은 임계현상이다. 이는 모험지향적 대외안보정책 여부와 군사력 능력의 분야로서 먼저 일본 대외안보정책의 방향을 보자면, 전수방위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창출 기여의 목표 아래 주도적 대외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있다. 유사관련법제정, PKO법, 대테러/이라크특조법 등 적극적/주도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방향이 평화적 목적하의 추진이기 때문에 안정을 바탕에 둔 모험중립적 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있다. 군사력 능력의 측면에서는 이지스함, 경항모급 DDH, PAC-III도입, 최신예 전투기/잠수함 건조·유지 등 최첨단 전력을 증강·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3가지 분석요소를 평가해보자면, 갈등을 반복시키는 자기유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재생산 되어왔으나 정부와 국민 전체로의 확산을 일으키는 자기조직화 현상은 현재 일정정도 부분까지는 확산되지만 전체 확산되지는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한순간 갈등관계가 붕괴되는 임계현상은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지(모험지향적 대외정책)가 표출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 갈등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바로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폭발에 민감해 질 수 있는 자기조직화, 임계현상의 측면을 잘 고려해야만이 갈등관리·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IV. 조어도 영유권 논쟁과 위험성 분석

개관. 조어도는 5개의 작은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된, 일본-중국,대만 간 영유권 분쟁지역이다. 이지역은 일본의 석유수송로 요충지이자, 막대한 석유자원(100억 배럴이상) 매장지로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지는 곳이며 분쟁의 발단은 근대 동아시아 역사적 근원에 기인한다.[3] 1895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대일강화조약결과로 미국영토로 이양되었으며, 20년뒤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때 일본영토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현재 일본의 지배하에 중국·대만측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측의 주장논거는 청일전쟁 당시 시모노세키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에 강제할양되었으며, 2차대전이후 제3자인 미일간 불법이양·복귀를 통해 현재 일본관할로 되었다는 것이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조어도는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겪으며 지속 긴장을 유지해 왔다.

분석. 독도가 한국의 명확한 영토지배에 대한 일본의 갈등유발이라고 본다면 조어도는 그 경계선이 독도처럼 명확치 않다.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측면에서 3가지 분석요인들을 살펴본다. 갈등유발의 자기유사성 요인은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일본·중국 극우단체들의 조어도 상륙 주기적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조어도 등대설치와 이에대한 중국의 영해법 제정이다. 일본

해상방위청이 1990년 우익단체가 설치한 등대를 항선표지로 정식선포하자 중국 전인대(全人代)에서는 조어도를 영해로 하는 영해법을 제정하였다. 셋째, 일본 역사교과서는 조어도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일본영토라 표현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켜왔다. 넷째, 중국어선의 조어도 조업과 일본의 대응에서 빚어진 마찰이다. 2010년9월 조어도 근해 중국어선과 일본순시선의 충돌은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어왔음을 상기시켜 준다. 적대감정 증폭의 자기조직화 현상은 2가지이다. 첫째 양국 국민의 반일·반중감정의 증대이다. 특히 중국의 반일감정은 최근 중국어선 충돌 및 나포, 일본 역사교과서의 조어도 영토 표현 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도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둘째, 민족, 국가중심의 우경화 현상이다. 일본우경화현상은 이미 언급한 바이며, 중국은 개혁·혁신하의 당·정의 인적쇄신을 피하지만 동북공정, 소수민족 정책 등에서 나타내듯이 민족주의적 경향이 다소 짙다. 특히 “최운도·배진수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조어도를 둘러싼 역사적 적대감은 대상지역 중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어 급격한 우경화 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잠재성을 띠고 있다. 임계현상은 대외정책 성향과 군사력 정도를 의미하는 바, 일본의 성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중국의 대외정책 성향은 기존평화질서에 조화롭게 안착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와 갈등은 피하지 않되 전체적인 틀은 깨뜨리지 않는 투이불파(鬪而不破)로 표현되며 이는 세계질서에서는 다분히 모험회피적이지만, 조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 관련 대일 강경책을 펼친 예에서 보듯이 동북아 역내질서에서는 국익을 위한 모험지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핵전력을 포함 항공모함까지 건조 확보함으로써 최강군사력을 보유중이다. 이상 3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갈등의 불씨는 계속 재생산되고 있으나 양국 공히 전체적 반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며, 힘을 터뜨릴 능력은 되나 의지와 성향은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진다. 즉 자기유사성 측면은 강하지만 자기조직화, 임계현상의 징조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위험성은 자기조직화, 임계현상이 뚜렷해질 때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쿠릴열도(북방4도서) 영유권 논쟁과 위험성 분석

개관. 북방 4개도서는 쿠릴열도 섬중 최남단 두 섬(에토로프, 쿠나시리)과 북해도 북쪽 두 섬(하보마이, 시코탄)을 의미하며, 이지역은 수심깊은 부동해로 오호츠크해에서 태평양으로 통하는 전략적/경제적 요충지로서 일본과 러시아간 논란이 있어왔다. 4개도서는 1855년 러일화친조약으로 일본영토로 확정되어 오던중 제2차대전 결과로 러시아가 사할린 구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에 같이 포함시켜 반환받음으로써 영유권 문제가 발

생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2차대전이후 맺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상 일본의 영토포기 조항에 쿠릴열도가 명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조약상의 쿠릴열도는 원래 일본영토였던 두 섬(에토로프, 쿠나시리)을 포함하여 북방 4개도서는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냉전시기 일본과 소련은 국익의 관점에서 대립적인 날을 세워오다가 1980년대에는 탈냉전 무드하에 타협모색기를 겪기도 하였다. 양국간 북방도서문제의 본격적 논의는 1993년 도쿄선언으로 시작되어 1997년 북방도서 영토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합의, 러일어업협정에서 일본어선의 쿠릴열도 조업 허용, 러시아의 쿠릴열도의 양국 경제활동 제의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논의수준에서 계속 답보상태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실효지배하는 러시아에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분석. 북방 4개도서의 갈등은 러시아와 일본 양측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먼저 자기유사성 요인은 4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양국 정부고위인사의 지역방문(순찰)이다. 2010년 러시아 메드베프 대통령의 방문 이후 북방4개도서에 대한 러시아 고위인사의 방문이 뒤따랐으며 일본 에다노 관방장관도 헬기이용 이지역을 순시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였다. 둘째, 러시아의 군사적 실효지배 강화이다. 최근 러시아는 이지역에 대공미사일과 공격용 헬리콥터 배치를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재생산하였다. 셋째, 러시아의 경제적 실효지배 강화이다. 이지역에 대한 신흥항·부두시설 건설 포함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을 러시아가 발표하였으며, 중국과 한국 기업에 지역경제협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넷째, 일본 역사교과서 내 쿠릴열도에 대한 연도표현이다. 일본교과서는 북방영토를 일본영토이나 러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기하면서 러시아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갈등이 어느정도로 증폭되고 있는가의 자기조직화 요인은 2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 실효지배를 하지 못하는 일본의 반러감정 수준이다. 일본입장에서는 도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실효지배 발표에 대해서도 일본 정계와 여론은 신중한 편이다. 관방장관 및 정부인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활한 대화와 안보분야의 양국간 협력 증진으로 압축된다. 둘째, 러시아의 대일인식이다. 탈냉전이후 러시아는 2001년 러일정상회담을 통해 북방영토관련 평화조약체결을 통한 해결원칙에 합의하는 등, 일본과 대결적 보다는 우호적 인식을 지녔으며 이의 급격한 변화는 현재까지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계현상이다. 일본의 대외정책과 군사력 수준은 이전 기술과 동일하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보편적으로 미국과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NEW-START), 6자회담지지 등 국제안보관련 협력적·평화적 방안을 추구하지만, 2008년 그루지야 사태에서처럼 이웃국가의 행동이 자국이해관계와 특별히 충돌될 때에는 용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5] 군사력 측면에서는 구소련의 군사력을 현

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21세기 10년동안 GDP 대비 평균 2.4~2.5%의 국방비 지출로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6] 그러나 여전히 역내 국가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 3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쿠릴열도의 갈등세력의 반복적인 생산은 주로 러시아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갈등 생산은 낮은 수준이라 보여진다. 갈등수준의 증폭, 즉 범위와 정도의 측면에서도 양국 공히 낮은 수준의 반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당장 폭발될 수 있는 임계현상의 2가지 측면에서 군사력 수준은 어느정도 높아져 있지만 의지적 측면인 대외모험적 정책 추진은 뚜렷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쿠릴열도의 위협성은 독도, 조어도보다도 낮은 단계라 볼 수 있다.

VI. 결론 : 한국의 대응

동북아의 갈등문제는 매우 신중히 고찰해야 한다. 이지역의 역사적 적대감은 어느지역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협력과 상생의 시대에도 동북아는 갈등의 수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본 연구의 주제는 동북아 해양갈등의 원인과 위협요인들을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의와 한국의 대응을 논하는 것이다. 현대에 올수록 그간 국제정치를 설명했던 기존이론들로서는 설명이 어려운 현상들이 더러 존재한다.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 비선형 논리, 불확실성, 자기조직적 임계현상, 협력의 진화 등이 개입함으로써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갈등관계를 예측하는 데도 일면 기여 가능하다. 9.11테러, 아프간전쟁, 이라크 전쟁 등의 발생은 점진적이었다기 보다 급격한 비선형적 결과물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잡계 이론의 핵심적 요인을 식별하여 갈등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가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동북아 해양갈등의 3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유사성 요인들은 충분하나 반복 재생산된 갈등들이 전체적인 자기조직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군사력과 대외의지를 고려할 때 갈등폭발 단계인 임계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단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반복 재생산 되는 자기유사성 요소가 反감정으로 쉽게 자기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유의해 보아야 하며 대외정책의 기초변화도 유심히 고려해야 한다. 중일간의 조어도 문제 또한 자기유사성 요인들이 발생하나 독도문제만큼의 강도와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며 자기조직화 및 임계현상 또한 앞서 언급했듯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 조어도 문제 또한 자기유사성 요소의 강도와 정도가 더 커지면서 역사적 적대감에 근원한 양국간의 반감정 증폭으로 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러일간의 쿠릴열도 문제는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임계현상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협성이 독도·조어도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여기서도 조직화와 임계현상의 증폭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는 한국영토의 주권에 해당하며 조어도는 에너지, 산업수송로로서, 쿠릴열도는 한국의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는 통로에 해당되어 분쟁발발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또한 이지역의 분쟁은 지역내 안보구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잠재적 위협의 불안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해양 갈등문제와 직면하여 한국은 다음 4가지의 대응측면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첫째, 갈등재생산 요인들이 반감정 증폭요소로 확대되지 않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독도문제의 경우, 우리의 확고한 독도관련 조치들이 일본국민의 우경화와 반한감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역내 안보협력 강화이다. 양자간의 대결구도가 역내 지역 안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일방이 자국의 편협한 이익에 근거하여 모험적인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대의 모험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군사력 유지이다. 칼더(Kent E. Calder)교수는 동북아 국가들이 군비증강을 지속하는 이유는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부족이라고 주장한다.[7] 동북아 해양갈등도 이에 근원한다. 문제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다. 적정수준의 군사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상대국의 모험성향과 의지 즉 임계점을 코앞까지 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Soft Power의 확산이다. 반감정의 자기조직화를 완화함에 있어 한류 열풍 등의 연성 매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독도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해양갈등의 긴장수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한 4가지의 대응은 주로 일본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나, 이의 여파는 일본의 현안문제인 조어도, 쿠릴열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1]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Y: Columbia Univ.1959.
- [2]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2005.
- [3]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
- [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10.
- [5] 이홍섭, *러시아의 안보전략변화*, 국방대 2010 안보연구시리즈 제11집5호, 국방대, 2010.
- [6] IISS, *Military Balance*, 2010.
- [7] Kent E. Calder, *Pacific Defence*, N.Y: Morrow, 1996.